

민주연구원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 정책브리핑 발간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 전환 필요”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 - 민원과 분쟁을 넘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이번 브리핑은 최근 교권 침해와 교직 이탈 증가, 생활지도 위축 등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 브리핑은 최근 교권 문제가 단순한 교사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공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생활지도·안전지도·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과 아동 학대 신고 위험으로 인해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보다 민원과 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교육활동 위축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도 퇴직 교원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교권 문제의 심각성이 교직 이탈과 공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최근 교권 보호 논의의 핵심이 단순한 처벌 수준과 책임 부담 완화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교육과정·학교 규정·안전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통상적 주의의무와 예방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교사 개인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사 면책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반면 폭언·폭행, 반복적 인격비하,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 고의적 방임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학생 인권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교권 보호와 학생 지원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 교사 절반 이상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심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특정 학생군(소위 금쪽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학교의 지원체계 부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위기학생 조기 개입, 상담·치료 연계, 행동중재 등 학교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담교사·전문상담사·학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브리핑은 사후 대응 중심의 교권 보호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또는 ‘교육청 전담대리제’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 학교장 책임 대응체계,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학교안전공제 등을 실질적 보호 기능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장체험학습·체육활동·생활지도 등 위험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예방조치 기준과 사후 보호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교사의 헌신과 책임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